

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인선 野-野 갈등

〈민주·국민의당〉

민주 재공모 요구하며 전체 의원 간담회 불참

시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 움직임

광주시의회가 입법정책관 인선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간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겪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향후 진행될 광주 시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회까지 '보이콧' 할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신임 입법정책관 선정 제검토를 요구하면서 본회의에 앞서 열릴 예정이

었던 전체 의원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공모를 거쳐 화순군청 사회복지과장을 지낸 A씨(61)가 선정돼 신임조회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영남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입법정책관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는 만큼 재공모해야 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일

정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소속 의원은 모두 22명으로 민주당이 12명, 국민의당이 9명, 민중연합당이 1명이다. 따라서 과반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이날 전 의원은 간담회는 무산됐다.

이날 전 의원 간담회에서는 현재 공모중인 시 산하 5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조기대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연간 의사 일정 변경 등을 협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 의원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인사청문회 운영계획 등에 대한 양당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인사청문회

일정이 상당 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장 인선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적쇄신 방침에 따라 자진 사퇴한 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문화재단·여성재단·신용보증재단의 사장과 대표들이다. 이들에 대한 공모는 진행중이며, 일부는 면접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시장과 시의장 간의 인사청문 업무 협약서에 따라 특위 구성 후 집행부에서 인사청문을 요청해 오면 10일 이내에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회 후 5일 안에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도록 돼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공무원 퇴근 후

9시간 휴식 보장

인사혁신처, 근무지침 시행

공직사회에 퇴근 이후 9시간의 휴식이 보장되고, 퇴근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가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7년 공무원 근무지침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공무원의 건강을 위해 퇴근 후에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시간~12시간의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또 퇴근 이후에 전화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도 자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양림동산의 꿈’ 개소식
광주를 국제적 문화·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출범한 ‘(사)양림동산의 꿈’이 8일 남구 양림동 양림교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 개소식을 열었다. 김혁중 양림동산의 꿈 이사장(광주대 총장), 윤장현 광주시장, 박주선 국회의원, 김양광 전 헌법재판관, 김희재 광주지검장, 송영길 국회의원, 최영호 남구청장 등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액 환수 거부 현실화

광주전남 농민회 “농민 수탈행위 중단해야”

납부율 전남·전북 1~2%, 전국도 5.1% 그쳐

사상 초유의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환급금 납부거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8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환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광주전남연맹은 “고지서 봉투에 환급금 납부방법을 자세하게 적은 안내장을 동봉하고 친절하게 직불금 총액, 환수 금액을 적어놓으면서도 쌀값이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말 한마디

없다”며 “정부는 책임전가, 농민수탈 행위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가에 전달된 고지서를 모아 태우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주부터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환급 고지서를 농가로 보내 수납에 들어갔다. 지난 7일 현재 전국적으로 환수 대상 금액 197억2000만원 가운데 5.1%인 10억원 가량이 납부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환수 금액 대비 21%, 경북도가 10%가량 납부율을 보였으며 쌀 농가가 많은 전남·북은 1~2%, 충남·북은 6%대에 그쳤다.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납부거부 움직임이 있는 데다가 가산금 발생에 따른 민원 등을 우려해 고지서에는 납부기한도 명시되지 않아 단기간에 납부율을 올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몇 차례 중간 정산을 거쳐 연말까지는 전액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동의를 제출한 농가는 직불금을 받으면서 우선 지급금 초과액만큼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에 동의한 농가는 70여 곳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공공비축미 우선 지급금 차액 환수 방침 철회를 촉구했으며, 전남도의 회도 같은 내용의 촉구안을 채택해 농민에 힘을 실었다.

한편 우선 지급금은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나 시장 격리곡을 매입할 때 현장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지난해 8월 1등급 40kg 포대 기준으로 산지 쌀값 93% 수준인 4만5000원에 책정됐지만, 쌀값이 폭락하면서 실제 매입가격은 4만4140원으로 확정됐다. 포대당 860원 차액이 발생해 농민들은 이미 받은 돈 가운데 차액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액은 공공비축미 매매에 참여한 농가당 평균 7만 8000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 신보재단 16명·평생교육진흥원 12명 응모

공공기관장 8곳 공모 마감 시, 도시공사는 재공고 요구

현재 공석인 광주 시 산하 공공기관장 8곳에 대한 공모 절차가 8일 모두 마감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공모를 마감한 광주 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평생교육진흥원에 각각 6명과 12명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시철도공사장은 9일 서류심사, 16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가 선정된 뒤 4월 중으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평생교육진흥원장은 오는 10일 서류심사, 17일 면접을 거쳐 3월 안으로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임기는 3년으로,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은 아니다.

앞서 도시공사 사장에는 9명이 응모해 면접을 통해 3명이 합격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날 “적격자가 없다”며 공사 측에 재공고를 요구했다. 도시공사 본부장급 임원 2명과 시청 국장급 간부 출신 등 3명이 후보로 추천됐으나 이 가운데 한 명이 사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임원추천위원을 선정한 뒤 스스로 응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셀프 추천’ 논란이 발목을 잡았다.

3년 임기의 교통약자지원센터 본부장도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화재단 대표이사에는 9명이 응모해 서류심사를 통해 6명으로 압축됐으며, 13일 면접이 이뤄지게 된다.

여성재단 대표이사에는 3명이 응모했고,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는 무려 16명이 응모해 면접을 통해 4명이 합격했다. 교통문화연구소장은 10명이 응모해 15일 서류심사, 20일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에 14개 콘텐츠 기업 등지

전남도·나주시와 투자협약

전남도도와 나주시는 8일 나주시청에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8일 나주시청에서 14개 콘텐츠 기업과 66억 규모의 나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입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콘텐츠밸리’ 조성의 첫발, 이들 기업의 투자로 227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또 이날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 인력 양

성, 공동 투자유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홍 폴투윈코리아 대표, 강준석 엘케이컨버전스 대표, 김인수 맨소프트 대표, 강용일 디디오넷 대표, 박현정 트리티움 대표 등 기업 대표와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무대행,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옥기·이민준 전남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현석기자chadol@

광주시 감사위, 광산구 위법·부당행정 52건 적발

광산구 재난기금 감사 반발

현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광주 광산구가 부적절한 재난관리기금 사용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등 부당한 행정업무 수십 건이 광주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광주 시 감사위원회는 8일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시정 31건, 주의 19건 등 행정상 조치 52건과 회수·추징 등 1억82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계 7건과 훈계 42건, 주의 6건 등 신분상 조치는 모두 55건, 2건의 기관경고와 함께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교육청 업무인 학교운동장 우레탄 제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광산구는 재난기금 사용과 관련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도 일고 있다.

임기제 공무원(가급 상당) 채용 과정에서 자격 기준에 미달한 응모자를 재직 기간 중복 선정 등으로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4급(서기관) 승진 예정 인원을 산정하면서 상위 직급인 3급 결원자도 포함해 부당하게 늘렸다고 시 감사는 지적했다.

주민투표로 동장을 임명하는 주민추천제의 도입, 운영과정에서 투표결과를 공개한 것은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것으로 개선·통보했다.

3억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면서 4차례에 걸쳐 1억원 미만으로 쪼개 경쟁입찰을 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대 29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시 감사위는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 650(W) × 1250(H)
• BN 1000 : 940(L) × 650(W) × 1250(H)

본사/영업본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604-1 공구상가 C 32동 401호 홈페이지 : bn1tech.co.kr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E-mail : bn1tech1122@naver.com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062-953-2995 Fax.062-953-2998

참숯 떡갈비/통닭 바비큐 훈연기
테이크아웃(포장판매) / 창업

현재 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저렴한 장비 구입하여 떡갈비/통닭 메뉴 추가/포장판매로 부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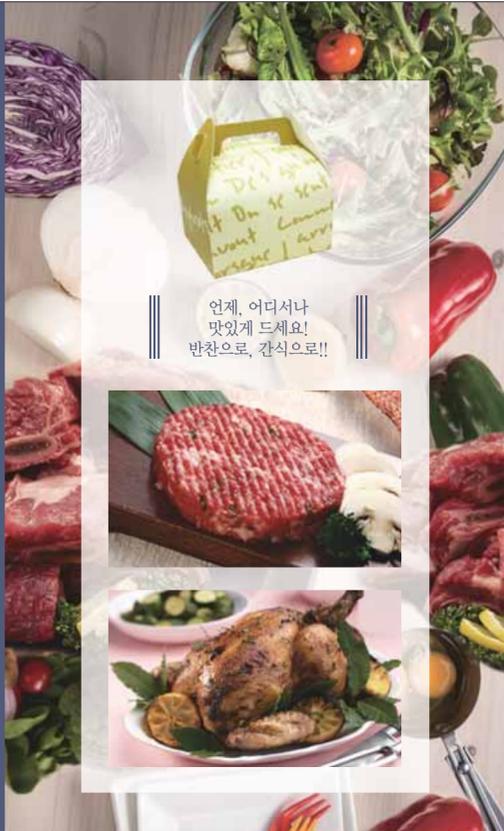
제품의 특징

- ▶ 육질이 살아있어 육질이 부드러움.
- ▶ 여러 잡내가 없이 깔끔한 맛이다.
- ▶ 뛰어난 맛과 육질(부드러운) 포장판매 가능하다.
- ▶ 최고의 숯(불맛)이 살아있다.
- ▶ 방장보관 3일, 재고사용할 수 있다.
- ▶ 장비 이동이 용이하다.
- ▶ 전기, 가스가 필요없다.

장기 카드할부로 구입비용 부담 줄이세요!!

적용분야

- ▶ 가정집(남녀노소)
- ▶ 음식점, 야유회
- ▶ 팬션/콘도
- ▶ 캠핑시



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드세요!
반찬으로, 간식으로!!